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정재정_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 목차 |

1. 의미와 사명
2. 출범을 둘러싼 양국의 역사 환경
3. 운영
4. 성과와 반성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정재정_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 의미와 사명

1)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 정상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가 공식 지원해 운영한 한일관계사 공동연구 조직이다(제1기 2002.5~2005.5, 제2기 2007.6~2009.12). 그 역할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일관계사의 쟁점을 한일 학자가 함께 연구·토론하고, 보고서를 간행·보급함으로써 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집중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 방대한 성과물을 생산했다. 그런데도 목표한 바대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및 역사교육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양국의 역사 대립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데도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한일의 역사 대립이나 갈등은 한두 번의 역사공동연구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고 넓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대립이나 갈등의 극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역사공동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역사공동연구를 통해 학문적, 인간적 교류를 계속하다 보면 일반인에게까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가 확산하여 궁극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완화 또는 축소시킨다. 곧 역사전쟁의 종식에 이르게 된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극도로 적대했던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도 50년 이상 역사공동연구를 계속해 역사전쟁을 마무리하고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역사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방법임이 틀림없다. 이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를 주도적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위원회의 설치, 활동, 성과, 과제 등을 정리해보겠다.

2)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노력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적극적 대응으로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동력을 계속 이어 가려면 역사인식의 대립이나 갈등을 완화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주요 원인이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전쟁을 끝내고 역사화해를 이룩하는 일이야말로 관계 개선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역사화해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고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화해의 최상 목표는 정부끼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서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존중과 신뢰를 쌓아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역사화해에는 역사문제의 공동연구와 상호 이해가 꼭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두 번에 걸쳐 운영한 바 있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궁극적 역할도 역사화해의 실현에 있다. 물론 역사화해는 단기간의 역사공동연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계속하면 힘이 되듯이, 역사공동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져 역사 대립이 완화되고 마침내는 역사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서로 관련된 역사를 허심탄회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전파하는 작업은 역사화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2. 출범을 둘러싼 양국의 역사 환경

1) 한일의 역사인식 충돌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한 배경에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를 이룩했지만, 1910년에 맺은 이른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의 합법·불법, 정당·부당, 유효·무효 등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다. 역사인식의 충돌은 때때로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하여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예를 들어 보면, 1982년 여름부터 1년여 동안 한국과 일본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기술을 둘러싸고 국민 감정과 외교 교섭에서 정면 대립했다. 일본 정부는 그해 11월 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검토에서 한국의 역사인식을 배려하겠다는 ‘근린제국 조항’을 마련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러나 2001년과

2005년에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기술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한국과 일본은 정치·외교 관계에서 심각하게 대립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역사인식은 식민지 지배로 야기된 ‘과거사’ 처리에서도 갈등을 빚었다. 곧 양국은 재한 피폭자, 사할린 잔류 한인, 일본군 ‘위안부’, 징용·군속 등의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사죄·반성·보상 등을 둘러싸고도 대결과 타협을 거듭했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직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외교 교섭과 소송, 운동, 합의, 번복 등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정부 요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식민지 지배 미화 발언 등을 둘러싸고 자주 충돌한다.

한마디로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불신은 강하고 깊어서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될 정도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궁여지책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역사인식 유연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발족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역사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인식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역사공동연구에 나설 수 있었다.

1965년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총리의 견해는 ‘한일 간 불행한 시기에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1993년 이후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일본 총리의 위와 같은 발언은 김영삼·호소카와 정상회담(1993.11.7), 무라야마 담화(1995.8.15),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10.8), 간 담화(2010.8.10)를 거치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간 담화는 3·1독립운동을 예로 들면서 식민지 지배가 정치적·군사적 강압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언급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역사인식이 한국의 역사인식에 상당히 접근함으로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었다. 한일관계의 악화보다는 유화가 오히려 역사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3) 민간의 역사대화 확산

일본의 역사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태동시킨 배경에는 10여 년 이상 축적

된 민간의 역사대화가 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의 역사교육연구회, 한일문화교류기금, 한국교육개발원,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과서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한일관계사학회, 한일역사교육교류모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은 일본의 조에츠교육대학, 일한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육정보센터, 가쿠게이대학, 비교사·비교역사교육연구회, 일한역사교육교류모임 등과 역사인식을 둘러싼 발표와 토론을 거듭했다. 역사교과서 기술과 역사수업 등을 주로 화제로 삼았다.



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 한일 동시 출간(2007.3.1)

한국과 일본의 민간 역사대화는 역사인식의 차이 및 쟁점을 확인하고,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유사한 역사대화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연구자·교육자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역사대화의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역사공통교재를 발간했다. 민간의 역사대화는 매스컴 등을 통해 정부·사회에도 알려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개선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일본이 민간 레벨에서 역사대화의 실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를 결단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4) 양국 정상의 공감과 결단

역사인식처럼 국민감정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를 다룰 때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지혜가 큰 영향을 미친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주요 계기가 되었다.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정상은 역사인식에서 상당히 접근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20세기 전반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여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견해를 같이했다.

「공동선언」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의 노력과 발전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교류 협력을 결의한 점이다. 곧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에 기여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 국민이 꾸준한 노력으로 번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데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광범위한 교류와 이해를 더욱 발전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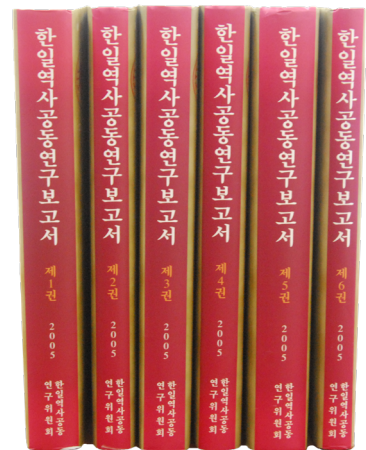
한일의 역사화해는 함께 절차탁마하며 성취한 역사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일본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평가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 이후 두 나라의 교류 협력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서로 상찬했다. 양국 정상이 이렇게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역사상 수립에 남다른 용기와 결단을 보임으로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운영

1)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실행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시아 역사자료센터를 개관하고 한국과의 역사대화를 지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6년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일역사연구추진공동위원회(1997~1999)와 한일역사가회의(2001~현재)를 운영했다. 이들이 곧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발족의 토대가 됐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2001.10)에서 한일관계사 공동연구를 합의함에 따라 한일역사공동연구추진계획지원위원회를 설치했다(2002.3). 지원위원회는 역사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역사가회의, 각종 학술교류, 한일신세기교류프로그램, 한일평화우호교류계획 등도 지원할 예정이었다. 지원위원회는 연 1~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역사공동연구의 목적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원위원은 한일 양국에서 각각 6명을 위촉했다. 필자도 그 일원이었다.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한국어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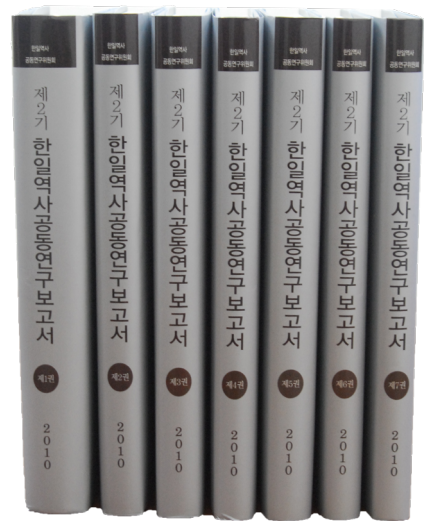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각 1인 외 연구위원 각각 10명(고대사 3, 중근세사 3명, 근현대사 4명)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3년에 걸쳐 19개 주제에 관한 연구·토론을 진행해 6권의 보고서를 간행했다.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2002)와 일본의 한류 붐 등으로 상호관계는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곧 한일 관계는 급전직하로 악화됐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새 역사교과서’를 다시 통과시키고(2005.3),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매년 참배하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2005.2).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2005.3). 양국 정상은 역사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역사공동연구의 재개를 합의했다(2005.6).

한국과 일본은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립에 관한 외교 협약을 맺었다(2005.10.27). 주요 내용은 한일관계사 중 학설이나 해석에 차이가 나는 분야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상호 이해와 인식을 심화한다는 것이었다. 또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연구 성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해 양국 정부,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배포하고, 교과서 편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 외 연구위원 16명(고대사 3, 중근세사 3명, 근현대사 4명, 교과서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고, 3년에 걸쳐 24개 주제를 연구 및 토론하여 7권의 보고서를 간행했다.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 회의 모습(2008)과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한국어판(2010)

4. 성과와 반성

1) 성과

두 번에 걸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의 심화, 차이점과 공통점 도출, 연구 인력의 양성과 역량의 축적, 인적 교류 네트워크의 형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교육부가 사무국을 따로 설치해 전폭 지원한 한국 측은 정식 보고서 이외에 많은 연구서와 자료집 등을 간행해 더 많은 결과를 쌓았다.

앞으로 역사학의 관점에서 공동연구의 진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주제와 주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 ① **고대사** 한국 측은 4~6세기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광개토왕릉 비문, 고고학 자료, 『송서(宋書)』 「왜국전(倭國傳)」, 『일본서기(日本書紀)』 「계체·흠명기(繼體·欽明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일본 측은 전형적인 임나본부설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광개토왕릉 비문을 통해 4세기 당시 왜가 강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애썼다. 일본이 6~7세기에 백제 등 한반도 국가로부터 불교, 한자 등의 선진문화를 전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한반도 여러 나라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환심을 사려고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② **중근세사** 위사(僞使)를 두고, 한국 측은 위사를 통교위반자로 규정하고, 조선 전기 한일관계사에서 통교위반자가 차지하는 역할 및 의의를 경시했다. 일본 측은 위사 발생부터 전개·확대·변용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그 실태와 규모를 밝히고, 그것이 중세 동아시아 통교권 공통의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왜구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 왜구가 일본인이 주체이며 그 성격은 해적집단이라는 점을 논증했지만, 일본 측은 왜구를 일본인이나 조선인 혹은 혼혈의 잡거집단으로 해석했다. 통신사(通信使)에 대해, 한국 측은 조선이 막부의 간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막부가 통신사를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대해, 한국 측은 임진왜란이 일본의 침략 욕구로 일어났고 조선이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했으나, 일본 측은 ‘침략’ 대신에 ‘출병’이나 ‘파병’의 용어를 쓰며 피해 상황을 축소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 ③ **근현대사** 개항기(開港期) 주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들이 국제법의 절차 등에 비추어볼 때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 주장했고, 일본 측은 일본이 힘

의 우위를 배경으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민지기(植民地期) 주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연마·육성하는 인간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한국인의 독립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폭압·동화 정책이었으며, 한국인은 이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개관했다. 일본 측은 한국에 근대적 관료제가 철저히 이식되고 국제화가 진전되어 그 반발로 민족적 독자성을 모색하기 위해 저항민족주의가 성립되고, 그것이 창조적 리더십의 결여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해방 이후기(解放以後期) 주제에 대해, 한국 측은 한일 조약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결여된 반면 한미일 반공전선 구축에 기여하고, 한국 경제의 대미·대일 결합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한일조약을 계기로 한 한일관계의 강화와 경제발전이 양국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제2기〉

- ① **고대사** 양측 연구자가 고대 한일관계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개설서 형식으로 집필하는 형식을 취했다. 따라서 일반인이 양국 고대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논점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양측 위원이 고대 한일관계사를 어떤 줄거리로 구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양측은 제1기 때 논란이 되었던 임나일본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일본 측은 가야 지역에 거주하는 왜인집단이라는 설을 폈고, 한국 측은 안라국에 설치한 왜의 외무시설이라는 설을 폈다. 또 일본 측은 신라 율령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한국 측은 그 존재를 인정하였다. 한국 측 위원이 논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본 측 교과서위원회 위원들이 교과서위원회 이외 분과에서 교과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 ② **중근세사** 일본 측이 전기 왜구에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1기 위원회 때의 주장을 철회하고 일본의 삼도민(三島民)이 왜국의 주체라고 확인했다. 제1기 위원회 중근세사 분과에서는 양측 위원 간에 갈등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원만하게 운영되어 가장 빨리 발표회와 토론회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위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공동연구의 관건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 ③ **근현대사** 주제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설정하여 쟁점을 부각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웠다. 양측에서 공동연구자와 연구협력자를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데도 곤란을 겪었다. 일본 측 연구협력자가 사전에 합의 없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한국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 일본 측 위원이 조선왕조를 ‘이씨조선’으로 호칭하여 한국 측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 측 위원이 논문 서문에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일본 측 위원이 삭제를 요구함으로써 합동회의가 결렬된 적도 있다.

④ **교과서위원회** 양국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여 제1기 위원회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공동연구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논문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더러 생겨났다. 한국 측은 한일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여 상호 비교하였는데, 일본 측은 자국사 교과서는 일절 다루지 않고 한국사 교과서만 검토하였다. 교과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에는 아직도 서로 오해와 편견의 벽이 두껍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일의 역사대립과 역사대화를 영어와 독일어로 소개한 학술서적(2003~2014)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한국과 일본의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높였다는 점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한다고 보았다. 역사공동연구는 두 나라가 역사문제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인상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인식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점은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반성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에서는 수정 및 보완할 점도 많다. 먼저 연구의 진전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연구 성과가 방만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별로 얻지 못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인 셈이었다. 또 역사공동연구가 마무리될 즈음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역사대립이 오히려 격화돼 역사공동연구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떨어트리는 사태를 맞았다. 정치가 역사를 압도하는 현상이 되풀이된 것이다.

역사공동연구의 방법과 목적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 양국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역사사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함께 이용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정리해 보급하는 게 좋겠다. 또 교과서나 개설서를 집필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작업도 해볼 만하다.

하나 더 부연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조와 발전에 도움이 된 역사사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늘리는 것이다. 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싸움보다는 교류를 더 많이 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긍정적 측면을 발굴해 소개하면 좀 더 빨리 역사화해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겠다.

3) 기대

한일역사공동연구는 역사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역사화해를 이룩하는 데 거쳐야 할 의례로서도 아주 요긴하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위원의 구성, 인선, 운용을 개선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70년 이상, 독일과 폴란드는 50년 이상 역사대화를 계속해 오늘날 유럽공동체를 형성했다. 이에 비해 2기에 걸쳐 10년 동안 진행되는 데 그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걸음마 단계에서 멈췄다고 볼 수 있다.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나가는 지금이야말로 역사공동연구를 재개할 시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 번영을 지속하려면 역사인식의 상호 접근과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다. 여기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재개는 투입하는 비용보다 거두는 효과가 훨씬 큰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분발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6.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9,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7.
- 정재정, 2014,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신문사.
-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역사교육연구회(일본), 2007, 『한일교류의 역사-선사에서 현대까지』, 해안.

| 정재정 |

1951년생.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다.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장·대학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일 정부가 지원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서울학연구소 평양학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 『한일교류의 역사』,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일본어 번역본, 『主題と争点で読む20世紀韓日關係史』),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일본어 번역본, 『韓日の歴史対立と歴史対話』)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